

‘말년없는 정부’ 목표... 文 대통령 “지지율에 일희일비 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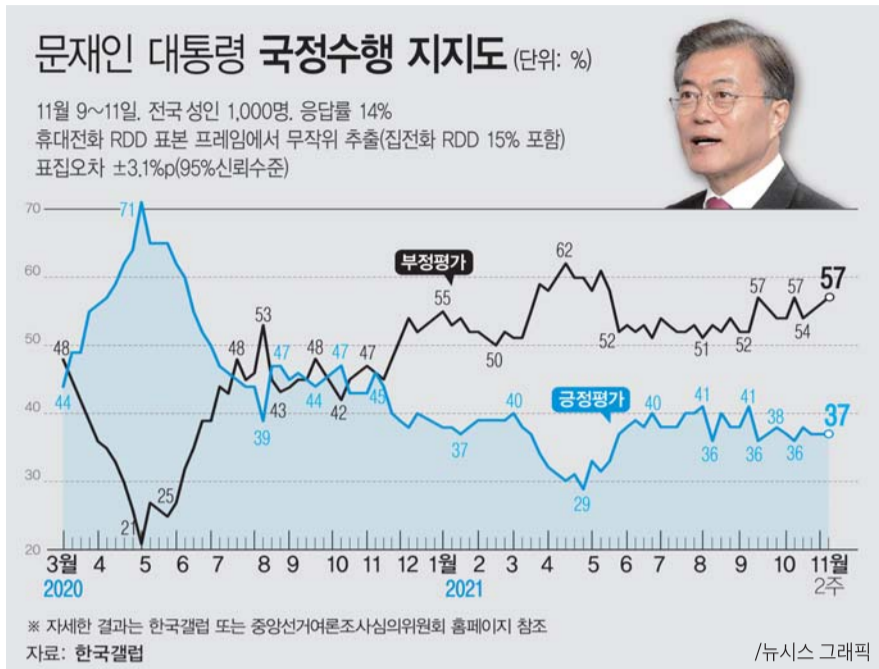
긍정평가 37%, 부정평가 57%
위드코로나·기후위기 대응 등
文, 국내외적인 현안 직접 챙겨

문재인 대통령이 ‘말년 없는 정부’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낮은 지지율이 연이어 나오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 정부와 차별을 두며 당·정·청 갈등도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레임덕’ 가능성까지 나오면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기후위기 대응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협력 등 산적한 국내외적인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를 두고 문 대통령은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공부문 여유분 활용이나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 단기 대책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수출다변화,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중장기 대안도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과 합



계 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202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 및 녹색기후기금 공여액 두 배 확대 계획 등을 재차 언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국정수행 지지율은 내렸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

상 1000명에게 실시한 뒤 12일 공개한 문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는 37%였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57%였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실시한 뒤 지난 8일 공개한 11월 1주차(1~5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도 34.2%(매우 잘함 19.9%, 잘하는 편 14.4%)였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3%포인트 오른 62.9%(매우 잘못함 46.6%, 잘못하는 편 16.4%)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높여야겠다”며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 정부와 차별성을 두면서 당·정·청 갈등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후보가 쏘아 올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약도 기존 당·정·청 합의에서 벗어난 만큼 향후 갈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당·정·청 갈등도 우려되는 가운데 오는 21일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 3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을 챙길 것’이라는 구상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하는 만큼 국민 관심사이자 현 정부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사과가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 현안에 대해 놓치지 않고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셈이다. 말년 없는 정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야권에서 문 대통령이 대선 국면 가운데 대국민 소통에 나선 데 대해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만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내년)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라며 선거 개입 의혹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주제인 위기 극복이나 민생경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주로 이야기 할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MZ 맞춤 행보... 이재명, 지지율 반등할까

매타버스 첫 일정으로 부울경 방문
2030과 접촉 늘리고 맞춤공약 내와
지역격차·출산휴가 등 청년과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MZ세대와의 본격적인 소통 행보를 늘려가는 것을 비롯해 지역 현안들을 직접 챙기는 등 한동안 정체됐던 지지율의 반등을 노리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부터 2박 3일 동안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첫 일정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돌며 청년들과의 만남은 물론 지역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민주당은 매타버스를 시작으로 정권재창출과 4기 민주정부수립을 위해 2030세대는 물론 향후 세대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특히 낮은 지지율을 보여 약점으로 분석되는 2030세대와 적극적으로 접촉을 늘리며 이들을 위한 맞춤공약 등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소화형 공약 첫 번째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주장하고, 2030세대가 주요 투자자인 가상자산 관련 간담회를 여는 등 2030세대의 표발을 공략하고 있다.

이 후보는 13일 부산 청년들과의 국민반상회 매타버스에서도 “청년 스타트업 이야기와 학생 토론도 들어보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 국민반상회 스타일로 아재(아저씨)의 낮춤말) 뱀새가 나긴 하지만 청년 의견을 들어 보겠다”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연구도 해야 하고 가능하면 상황을 바꾸는, 집행하는 정책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 부울경 일정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전국순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앞에서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통해 지역 격차, 출산 휴가 및 육아 문제, 창업 문제, 노동 문제,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추가 지급, 기본소득, 청년 예술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청년들과 논의를 이어간 것은 물론 전통시장, 대우조선소 미팅, 한국항공우주산업 방문 등의 일정을 통해 지역 현안도 챙겼다.

이 후보가 2030 공약에 속도를 내며 당내 경선 이후 정세기에 들었던 지지율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하락세를 보이던 민주당 지지율도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6%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하며 양당 지지율 격차는 8%포인트에서 2%포인트(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로 좁혀졌다.

이동학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장은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2030세대만 중요하다는 인식은

아니고, 이 후보의 일정을 보면 전 세대가 아우러져 있다”며 “일단 국가 전체의 활력을 만들기 위해서 침체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환경 자체를 민주당이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인적국 제공항 사태 등 당에서 청년들을 위해 제시한 정책들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꾸중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며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 세심하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종합적으로 모아 정책을 추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본부장은 “큰 틀에서 국가적으로 활력을 만들 수 있는 성장동력, 재생산 등을 제시해 청년들의 전망을 밝게 만들고 이는 꼭 청년만 중요한 것이 아닌 결국 대한민국 전체와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집권여당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이 후보가 해왔던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이재명은 반드시 할 것이라는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종부세 전면 재검토... 집값 안정 유도”

윤석열, 1주택자 면제 등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가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를 인하여 집값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문 정부)가 논란 끝에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인상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하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반 ▲과잉 금지의 문제가 쟁점을 밝히며 “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금을 현금으로 내는 것”이라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도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냐”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사진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여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고 장기 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중장기적 공약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산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유형별로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등)는 80억원이다.

/박태홍 기자 pth285@